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2017. 08. 31.

장창석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목 차



I. 충청남도 현황

1. 갈등관리 현황
2. 자치법규 현황



II. 조직 및 인력

1. 행정조직상 갈등관리기구
2. 법 제도상 갈등관리기구



III. 기능과 역할

1. 주요기능
2. 주요업무



IV. 성 과

1. 갈등관리
주요 추진사업



V. 기여와 한계

1. 기 여
2. 한 계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충청남도 현황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현황

- 2017. 8말 현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지정·관리 갈등은 21건이며, 시·군 갈등현안 및 잠재 갈등 목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중임
- 대부분의 갈등이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충청남도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음

연번	갈등 사업명	갈등주체	갈등유형
1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천안시 ↔ 아산시	교통
2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공군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사격장)
3	서산 장동 폐기물 매립장 설치	시민 ↔ 사업장<㈜부강>	비선호시설
4	논산 바이오가스화 시범 사업 추진	주민 ↔ 논산시	비선호시설
5	논산 태화산업단지 조성	논산시민 ↔ 태성화학	지역개발
6	당진 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당진시 ↔ 동부발전	비선호시설
7	당진·평택항 매립지 경계 분쟁	충청남도, 아산·당진시 ↔ 행정자치부, 평택시	지방행정
8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건설	한국전력 ↔ 지역주민(송악·신평·우강)	수자원개발·이용·보전

1. 충청남도 현황

갈등관리 현황

연번	갈등 사업명	갈등주체	갈등유형
9	북당진 변환소 건설	한국전력 ↔ 지역주민(석문 · 고대 · 송산 · 송악)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10	당진시 육성우목장 조성	당진낙협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
11	금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금산군 ↔ 주민	지역개발
12	금산 불산공장 이전	대책위 ↔ 사업자	비선호시설
13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서천군 ↔ 군산시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14	서천-군산 공동조업구역 설정	충남 서천군 ↔ 전북 군산시	일반행정
15	청양 강정리 폐기물매립장 설치	도 ↔ 청양군 ↔ 주민 ↔ 업체	석면, 폐기물
16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시설 설치	도, 민간사업자 ↔ 지역주민	비선호시설
17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사업	국토교통부(철도시설공단) ↔ 주민 ↔ 주민	교통관련
18	예산 대술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민 ↔ 사업자	비선호시설
19	서부내륙고속도로 예산군 통과 노선	주민 ↔ 사업자, 주민 ↔ 주민	교통
20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 체계 재편사업	충청남도 ↔ 환경단체	수자원개발 · 이용 · 보전
21	안면도관광지 개발	충청남도 ↔ 주민	지역개발

1. 충청남도 현황

자치법규 현황

- ㄱ 충청남도는 '14. 12. 30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 (최초 제정 10. 11. 10) 하였으며, 현재 15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완료한 상태임
- ㄱ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심의 위원회는 16년말 현재 7개 시·군이 구성을 완료한 상태임
- ㄱ 시·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초기 단계에 있으며,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구분	자치법규명칭	제·개정일	심의위원회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4. 12. 30	○
천안시	천안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14	-
공주시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2. 7	○
보령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20	-
아산시	아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9. 25	○
서산시	서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6. 28	-
논산시	논산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0. 31	○
계룡시	계룡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8. 9	-
당진시	당진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 1	○
금산군	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2. 12. 31	○
부여군	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30	-
서천군	서천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9. 27	○
청양군	청양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20	-
홍성군	홍성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12. 30	-
예산군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1. 7. 15	○
태안군	태안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13. 3. 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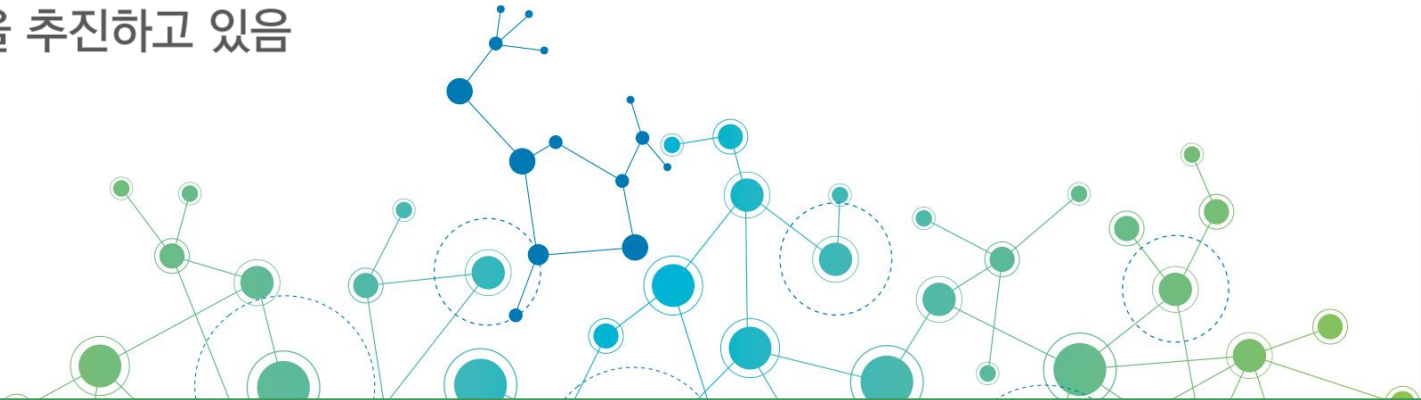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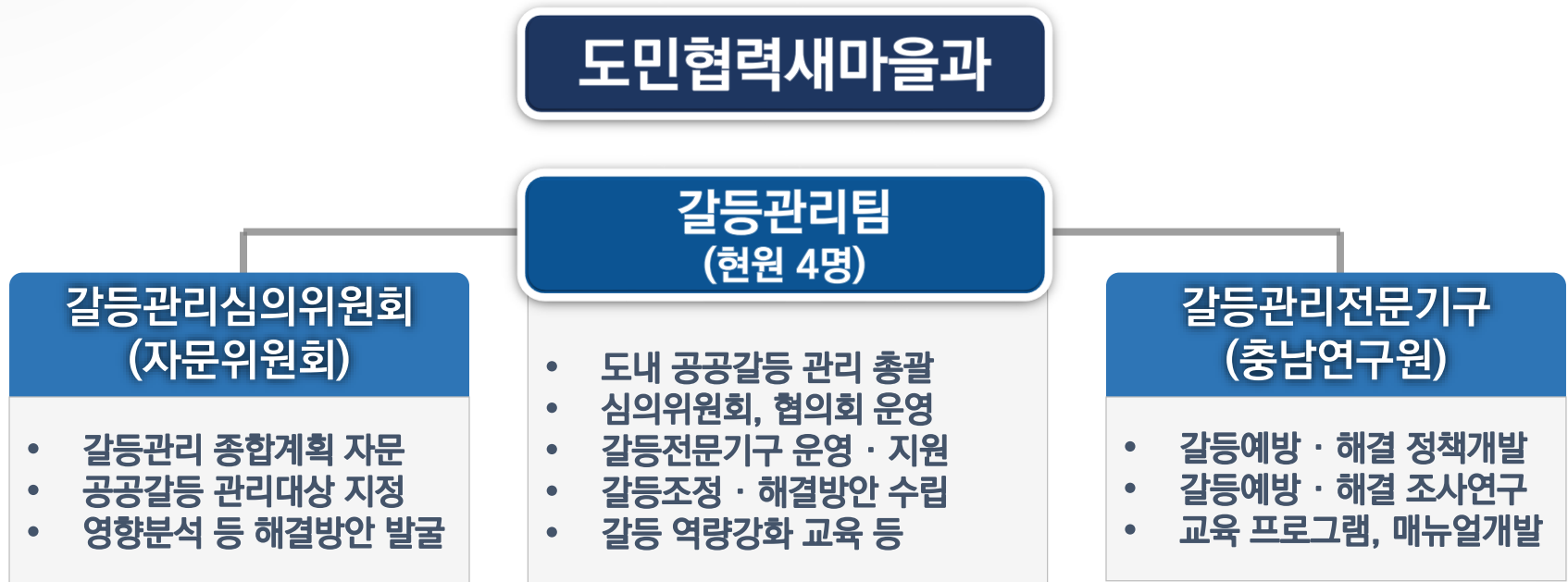
조직 및 인력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 ㄱ 충청남도는 행정기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갈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협력팀 소관업무 중 하나로 분장하여 다루어 왔음
 - 자치협력팀의 업무는 선거 사무와 갈등관리 사무, 인권 사무, 주민등록 업무 등 민원 사무 등이 분장되어 있었음
 - 이후 갈등업무의 비중이 커지게 되자, 2015년 1월 갈등관리 전담부서인 갈등관리팀(1팀 4명)을 도민협력새마을과 내에 신설함
 - 주요업무로는 공공갈등 영향분석,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공공갈등진단 및 갈등대응계획 수립, 갈등전문가집단 등 관리,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음



행정조직상 갈등관리 기구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ㄱ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공공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의회의원, 사회단체,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도와 시군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관리대상의 지정·조정, 갈등관련 조례의 정비, 공공갈등 진단 등 해결방식의 발굴·활용, 갈등영향분석 실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그밖에 도지사가 갈등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자문활동을 펼치고 있음

ㄴ 충청남도 갈등조정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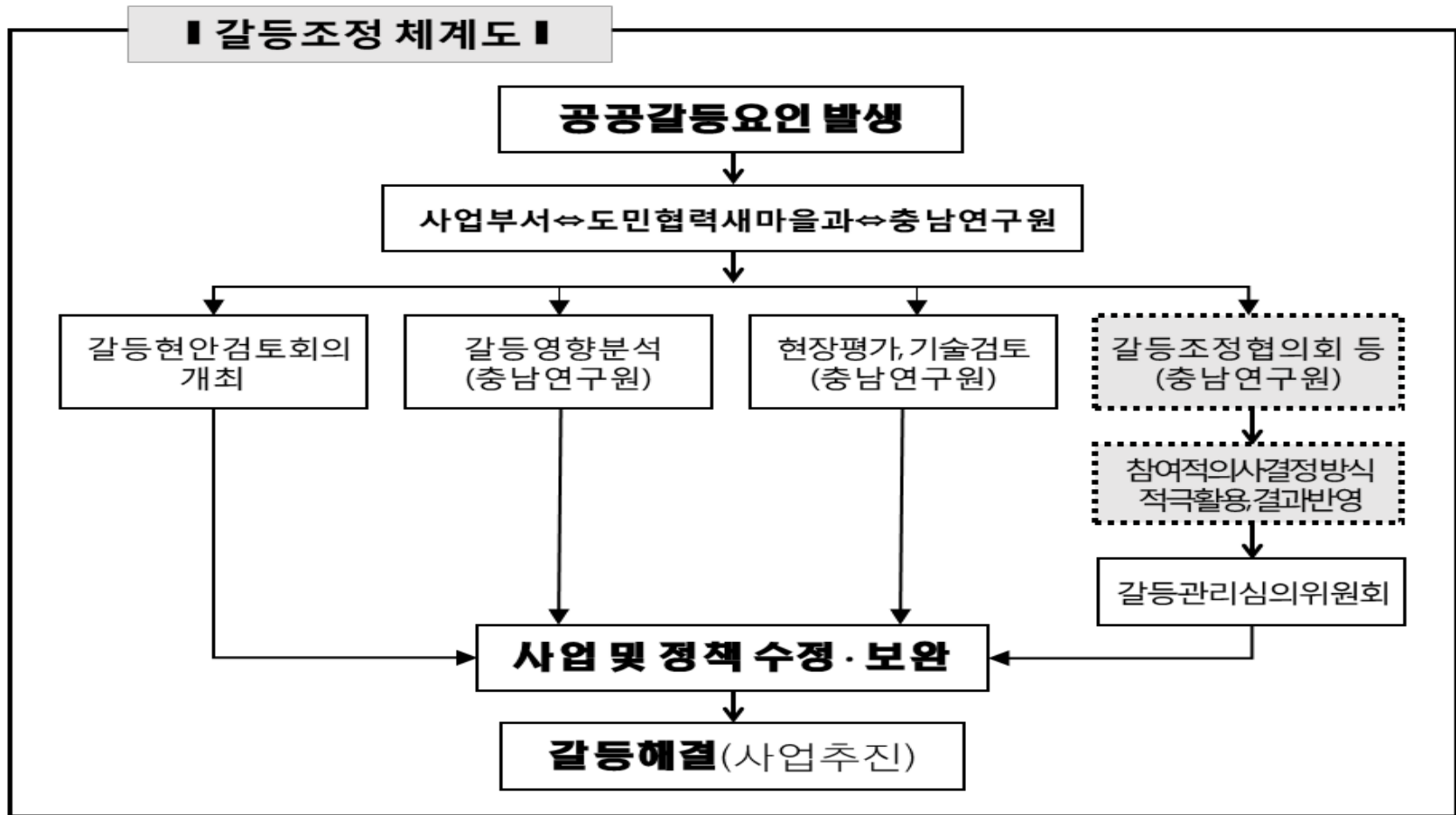
- 충청남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음
- 설치 목적은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갈등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구성은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됨.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선출함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 갈등관리 전문기구는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운영토록 되어 있음
- 관련 사무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무위탁과 함께 소요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2016. 5)된 곳은 충남연구원으로 연구원 내에 “공공갈등연구팀”이라는 조직(1팀 2명)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연 평균 9,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
- 조직에서 하는 일은 갈등관련 인력 pool을 구축하여 갈등현장 조정·해결지원,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배포, 갈등영향분석 수행,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정책·조례·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 상생·협력 및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도지사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을 수행토록 규정 되어 있음

법제도상 갈등관리 기구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능과 역할

3. 기능과 역할

주요기능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매뉴얼 개발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3. 기능과 역할

주요업무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갈등관리 교육 · 홍보

갈등영향분석 등을 통한
해결방안 제안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 보급

갈등현장에 대한 갈등
조정 · 해결을 위한 지원 활동



기타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성과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ㄱ 공공갈등영향분석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사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의 문제, 내·외부 환경 요인 분석

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 도내 갈등관리 목록(대상) 지정
- 갈등영향분석 대상 선정 및 결과 심의

ㄷ 갈등관리조정협의회 운영

- 공공갈등 당사자 간 조정·의지가 있는 사업 선정
- 20명 이내로 행정기관, 당사자, 전문가 등 참여

ㄹ 갈등관리 맞춤형 교육

- 지역주민·사회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대상
-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전환 교육(워크숍, 위탁교육)



갈등관리 주요 추진 사업

- ㄱ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
 - 갈등관리 역량 강화 교육,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원
 - 갈등현장 지원 활동 전개
- ㄱ 갈등관리 매뉴얼 제작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갈등관리 체계 구축
 - 갈등의 특성과 사안별로 구분 제작 실효성 제고
- ㄱ 공공갈등 사전 진단체
 - 신규 공공정책 수립, 다수이용 공공정책, 선호시설 및 비선호 시설
 - 면밀 검토 진단(정책 개요, 갈등 내용, 대응계획, 해결방안 등)
- ㄱ 갈등문화행사개최
 -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대상(약 150명)
 - 공공갈등 교육 연극 및 모의 갈등조정협의회 경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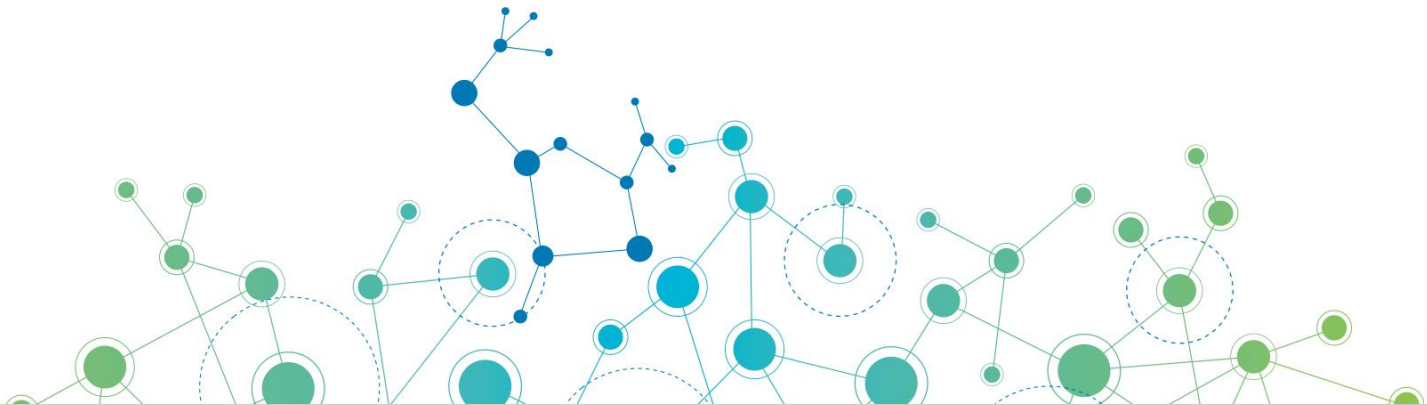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현황

기여와 한계

기여

- ㄱ 법적, 조직적으로 체계적인 갈등관리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음
 - 충청남도는 조례를 바탕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부서를 체계적으로 분리하여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음
 - 갈등관리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 조직적으로 명시된 기준이 있다면 조직 운영이 보다 효율적임
- ㄱ 갈등관리의 역할을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음
 - 보통 갈등관리시스템의 역할을 사후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충청남도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제반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한계

ㄱ 갈등관리평가 체계 구축 필요

- 갈등관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갈등관리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하는 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ㄱ 주민참여형 갈등조정 미흡

-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갈등은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 등으로 해결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사업에 대한 실행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중심의 문제 접근 방법 지양 필요

ㄱ 맞춤형 대응 부족

- 중앙정부의 공공정책은 갈등발생 요인이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지방의 권한이 미약하여,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사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의 권한 확대와 맞춤형 갈등대응 전략이 요구됨



감사합니다